



[산업] 청년 실업 中企 구인난 해소 팔 걷은 SK하이닉스 04



Economy

코스피	2240.80 (-18.11)	코스닥	761.18 (-0.76)
금리 (우대세 3%)	2.06 (0.00)	환율 (원/달러)	1130.10 (+2.20) (16일)

### 文 대통령, 30일 300여 공공기관장 소집

# 채용 투명화·경영 혁신 등 공기관 개혁 '채찍질'

중앙정부 산하 공기관 대상 취임후 첫 CEO 워크숍 주재 공공기관 혁신 2단계 발표 등 文 직접 나서 개혁 드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30일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워크숍을 주재하고 공공기관 개혁 작업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30일 중앙정부 산하 300여개 공공기관장들을 한 곳에 '집합'시킨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전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주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극대화, 채용 투명화, 경영 혁신, 보수 및 관리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개혁에 더욱 채찍질을 가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공공기관 혁신 2단계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16일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이 이달 30일 열린다. 다만 장소 등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3차 남북정상회담이 8월내에 치러질 가능성도 제기

데 이날 공공기관장 워크숍 개최도 불투명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9월 초순 이후 열릴 것으로 유력해지면서 워크숍은 계획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12월 처음 열렸던 공공기관장 워크숍은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다. 당시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 2년째를 맞이하고, 공공기관장 물갈이도 거의 마무리되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공부문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로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불거진 채용비리 문제를 보고받고 대노한 바 있다. 감사원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나서 만연해 있는 채용비리를 들춰냈고, 후속조치도 곧바로 이어졌다. 직후 문 대통령은 전 부처 장관들을 모아놓고는 "채용 비리 만큼은 완전히 뿌리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후속조치를 하고 공정한 채용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 직원들

이 채용비리 등에 연루될 경우 공무원과 같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혁신대책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특히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 비정규직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지를 밝히는 등 상당한 공을 들이기도 했다.

공공부문등 비정규직의 경우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10만1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로 결정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20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바꾼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정책과 관련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극대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여성임원 20% 달성 ▲호봉제 전면 폐지 및 직무급제 도입 ▲분야별 기능 조정 ▲관리체계 개편 ▲주무부처 참여·권한 확대 및 규제·간섭 최소화 등의 정책을 내놓거나 계획하고 있다.

현재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규모가 큰 공기업 35곳, 준정부기관 93곳 등 총 338곳에 이른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메트로경제와 함께 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2015년 11월 '뉴메트로 선언'과 2018년 3월 일부 유가치 전환을 통해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 메트로경제가 미래 언론의 주역이 될 젊은 인재들을 찾습니다. 메트로경제는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중산층, 국가경제에 기여를 하는 기업들을 위해 경제 위주의 기사를 발굴해 온라인, 모바일, 지면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6년 역사의 메트로경제와 함께 언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인재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부문 취재기자 (수습)
-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취재 역량평가 3차 : 면접(블라인드 방식)
- 모집인원 : 0명
- 응시자격 :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 (2019년 2월 졸업예정자도 응시가능) <공통사항> ①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②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해당자 우대
- 제출서류 ① 지원서 1부 (= 본지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② 졸업증명서 1통, 석·박사 학위증명서(해당자)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2장(지원서와 수험표 부착) ※ 이메일 접수자 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②③항의 서류를 면접 시 제출
- 원서접수 ① 기간 : 2018년 8월 10(금) ~ 2018년 8월 20일(월) 오후 6시까지 ② 접수방법 :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8월 20일 도착분) ③ 접수장소 :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18(옥인동) (쥬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년 8월 24일(금) 본지 홈페이지 공고
-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로 문의 (전화 02-721-9826)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성장률 감소 초래



### 경제성장 위축

소득주도 성장 '실패' 평가 하반기 혁신정책 내세워 신산업 육성·일자리 도모

'J노믹스'로 대변되는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지난 1년간 펼친 정책들은 분배차원이란 모호했지만 성장차원에선 낙제점이었다는 것.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은 부정적 효과가 부각되며 앞으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요인으로 떠올랐다. 분배정책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를 기반으로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긍정적인 접근이었다.

전문가들은 투자와 기술개발, 감세 등 성장정책을 따로 가져가는 가운데 분배정책 측면에서 소득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한국 vs 미국, 정책의 차이가 성장격차 벌러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이미

<정부 13개 혁신성장 동력 부문> /과기정통부, 이베스트투자증권

지능화 인프라	빅데이터(D)	차세대통신(N)	인공지능(A)
스마트 이동체	빅데이터 개방·활용	5G, IoT 사용화	AI 핵심기술 개발
융합 서비스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맞춤형 헬스케어
산업 기반	레벨3 자율주행	공공용·산업용 무인기 보급	스마트시티
	개인맞춤 정밀의료	개별산업과 VR·AR 융합	감상증강현실
	지능형 반도체	첨단소재	지능형로봇
	시용 반도체 개발	항공부품, 자동차 경량화	개인맞춤 정밀의료
		후보물질 100개 개발	도시문제 저감
			개별산업과 VR·AR 융합
			의류·안전용 서비스 로봇
			지능형 반도체
			첨단소재
			항공부품, 자동차 경량화
			후보물질 100개 개발
			신재생 에너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여두워지기 시작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9년의 경우 2.8%에서 2.7%로 낮아졌고, 2020년은 2.7%에서 2.55%까지 낮아졌다. 올해 성장률을 2.9%라고 가정하면 매년 0.2%포인트씩의 성장률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셈이다.

살아나는가 싶었던 산업생산은 하락세로 전환했고, 설비투자도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하락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정부의 인프라투자 축소는 결국 급격한 투자감소로 이어졌고, 경제성장률과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정부지출은 늘었지만 복지지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금융연구원은 이달 들어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무역분쟁 등 대

외 요인도 있지만 실업률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도 주요 리스크로 꼽혔다.

금융연구원은 "개별소비세 감면과 아동 수당 도입 등의 정책이 소비 심리를 지탱하겠지만 이 역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특히 향후 1~2년내 경기하강 위험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반면 미국의 상황은 정반대다. 올해 2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9%,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8%였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12배에 달할 정도로 경제규모가 크지만 성장률은 지난 2분기 한국을 거의 따라잡았고, 올해는 3%를 웃돌아 한국을 추월할 전망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최광혁이코

노믹스트는 "미국과 한국의 성장률 격차가 발생한 원인은 명확하다"며 "미국은 감세정책을 통해서 소비를 증가시켰고, 한국은 인프라투자 축소, 증세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정부의 감세안은 2분기 소비증가로 이어졌고, 하반기는 인프라투자법안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 ◆ 혁신성장이 국내 경제 선발투수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내세우며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을, 공급 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을 성장의 축으로 내세웠다.

경기침체와 회복의 갈림길에서 이제 남은 대안은 혁신성장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통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달 기획재정부 내놓은 '하반기 정책방향' 발표에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동시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경제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2면에 계속)

/안성미 기자 smahn@

## '알렉사' - '코타나' 뭉친다 아마존·MS, AI 비서 통합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양사의 인공지능(AI) 음성인식 비서 기능을 통합한다고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제프 베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와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양사의 인공지능 음성인식 비서인 '알렉사'와 '코타나'가 올해 말까지 상대 플랫폼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마존과 MS는 앞서 1년 전부터 통합합의를 했으며 지난 5월 코타나-알렉사 통합 플랫폼을 시연한 바 있다. 이런 알렉사와 코타나의 기능 통합은 경쟁자인 애플 시리, 구글 어시스턴트와의 경쟁

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 분석이다. <관련기사 3면> 두 인공지능 기능이 통합되면 MS 코타나를 가진 사용자도 아마존을 통해 물건을 주문할 수 있다.

음성 지시를 통해 배송 추적, 추가 주문, 반송, 환불 같은 다양한 명령어도 실행할 수 있다. 반대로 아마존 알렉사가 탑재된 에코 스피커 사용자는 MS 코타나를 불러내 PC 캘린더를 정리하고 이메일에 답신을 할 수 있다. 코타나를 통해 윈도우 10 PC에 접속할 수도 있다.

아마존과 MS는 일단 베타 버전을 내놓아 사용자 반응을 관찰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통합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안병도 기자 catchrod@